

“산정지구,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지 검토 당시 토지 거래 집중”

최근 6년 479건 중 2018년 125건
정의당 광주시당 정보 유출 의혹 제기
지역 정치인 연루설 등 투기 의혹 확산
광주시 조사 한계...특별조사위 설치 촉구

묘목 등을 심는 품수로 판매 차이 및 보상금을 극대화하고 있다. 산정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시당은 또 ‘투기성 거래는 없었다’는 광주시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근무 이력 있는 공직자 명단과 토지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의 셀프 조사는 한계가 명확하다. 가족 등 차명 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공직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지방의원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의회와 5개 구 기초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에서 402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으며 공무원 2명이 토지를 거래했지만, 투기성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내놨다. 시는 1차로 산정지구 일대 전체 4000여건(최근 5년 거래 기준)의 토지 거래 중 핵심지인 402건에 대해 공무원 이름 대조조사만 했으며, 현재 나머지 3600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특히 경찰과 합동으로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지역 정치인에 대한 투기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역사회의 산정지구 투기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법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조사 범위가 워낙 넓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경찰과 협조를 통해 합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불법 땅 투기 세력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 로버트 램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왼쪽)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한미 70년 동반자... 한반도 비핵화·평화 위해 공조 지속”

미 국무장관·국방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 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리더십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해 열린 ‘2+2 회담’ 및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식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 강화를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장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성공적 백신 보급으로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경제 회복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더 나은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을 축하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강조해달라고 했다. 또 동맹을 키워나가고 강화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며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민심은) 철골같다”며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너무 중요하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도시개발 11개지구 토지 투기 전수조사

도·개발공사 공직자 2500명 대상
6월까지...시·군은 자체조사 권고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토지 거래 명세와 대조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 해당 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자진 신고센터를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공무원 등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시·군 공무원 조사는 해당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부동산 투기수사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에 대한 전남도 공직자 등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김영록 지사 특별지시로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를 위해 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도 총무과(인사)·토지관리과(토지거래)·지역계획과(도시계획)의 협조를 받아 조사TF를 구성한다.

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5%·윤석열 23%·이낙연 10% 4개 기관 합동조사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39%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오차범위 내 양강구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5%, 윤 전 총장을 꼽은 응답자가 23%였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적합도 차이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

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0%였다. 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변함이 없었고 윤 전 총장이 1%포인트, 이 위원장은 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43%, 이 위원장을 꼽은 응답자가 27%였다. 윤 전 총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58%, 이 지사가 6%, 이 위원장이 3%였다.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7%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7월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53%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인 작년 12월 3주와 동률을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0%, 국민의힘 26%, 정의당 5%, 국민의당 5% 순이었다. 시장 선거를 앞둔 서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27%의 지지를 받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노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